



“자본+법+사법부, 노동자 안전 활동 방해”

작업중지권 보장 대법 판결 촉구 기자회견 ... 화학물질 유출, 작업중지권 행사 콘티넨탈지회장 징계

사법부가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판결을 연달아 내리고 있어 손가락질받고 있다. 금속노조는 대법원을 향해 “온전한 작업중지권을 보장하라” 라고 촉구했다.

금속노조는 9월 12일 오전 대법원 앞에서 대법원이 작업중지권 관련 최초 대법 판결을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내려야 한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반복 중대재해 예방 위한 작업중지권 보장 판결 촉구 금속노조 기자회견’에 재판 당사자인 조남덕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콘티넨탈지회장이 참석했다. 조남덕 지회장은 2016년 당시 작업중지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3개월 정직 처분을 받은 사건을 설명하고, 대법원이 작업중지권을 보장하는 상식에 맞는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작업중지권은 산업재해 발생 위험에 놓인 노동자가 작업을 중단하거나 대피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권리다. 자신과 동료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행사하는 사업장 안전·보건에 관한 노동자의 참여권으로, 산업재해 예방과 재해 확산 방지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평가받고 있다.

조남덕 콘티넨탈지회장은 지난 2016년 사업장이 있는 세종시 부강

공단에 티오비스라는 화학물질 유출 사고가 발생하자, 동료들을 대피시키기 위해 작업중지권을 행사했다. 티오비스는 상온에서 황화수소 형태로 기화한다. 흡입하면 구토, 어지러움, 호흡곤란, 메스꺼움 등을 일으킨다. 유출 사고 현장과 콘티넨탈 현장의 거리는 190m에 불과했다.

조남덕 지회장은 사고를 인지하고 사측에 대책을 물었지만 기다리라는 대답만 들었다. 회사 답변을 한참 기다리던 조 지회장은 소방본부와 통화했고, 지역 대피 명령을 내린 사실을 확인했다.

조남덕 지회장은 노동부 산업안전감독관이 사업장에 방문해 대피를 권고하자 작업중지권을 행사했다. 사측은 조 지회장의 작업중지권 행사가 위법하다며 3개월 정직 처분을 내렸다.

조남덕 지회장은 기자회견에서 “근로감독관이 회사에 ‘이미 많은 사업장이 대피했으니, 콘티넨탈도 대피하라’ 라고 권고했다” 라고 밝혔다.

조남덕 지회장은 “회사가 ‘사람이 죽은 사고도 아닌데 대피했다가 회사가 피해 보면 근로감독관이 책임질 거냐’ 라고 따져 물었다”라며 “회사의 안전 대책을 기다리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 라고 증언했다.

조남덕 지회장은 “화학물질 유출 상황에서 작업중지권을 행사하고 대피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생각했지만, 1, 2심은 긴박한 위험이 없다고 했다” 라면서 “사법부가 생각하는 긴박함의 기준은 대체 무엇이나” 라고 따져 물었다.

김유정 금속노조 법률원장은 “사건의 쟁점은 조남덕 지회장의 작업중지권 행사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 이 있다고 믿을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는지에 있다” 라며 “당시 조남덕 동지가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합리적인 이유는 차고 넘쳤다” 라고 단언했다.

김유정 원장은 “콘티넨탈 현장은 티오비스 유출원으로부터 불과 190m 떨어져 있었고, 콘티넨탈 현장에서 이상증세를 느껴 병원에서 치료받은 노동자들이 있었다. 인근 공장에서 재해자가 발생했다” 라면서 “전문가인 근로감독관조차 대피를 권고했고, 인근 마을주민도 대피령에 따라 대피했다” 라고 설명했다.

직업환경전문의 최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활동가는 기자회견에서 “법·제도, 사업주와 법원까지 노동자의 산재 예방 안전 행동을 방해하고 있다” 라며 “노동자 작업중지권의 목적은 산재 예방인데, 위험을 사후판단하는 재판은 작업중지권을 무력화한다” 라고 비판했다.

13년째 노조탄압 류진 풍산 회장을 회장 뽑은 '한경협'

박근혜 국정농단 가담 전경련, 이름 바꿔 ... “풍산마이크로텍지회 해고부터 해결해야”

금속노조가 한국경제인협회(아래 한경협)로 이름만 바꿔 정경유착 활동 재개에 나선 전국경제인연합회(아래 전경련)를 규탄하고 나섰다. 노조는 한경협 신임 회장 류진 풍산그룹 회장에게 풍산마이크로텍 2010년 매각·정리해고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금속노조는 9월 1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 앞에서 ‘노조탄압·재벌특혜 풍산그룹을 회장 앉히고 부활한 전경련(한경협)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다시 정경유착에 나선 전경련이야말로 윤석열이 깨려는 ‘불법 카르텔’이다”라고 지적했다.

윤장혁 위원장은 “전경련은 노조법 2·3조 개정을 방해하며 대체근로 허용, 점거 파업 금지, 사용자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삭제 등을 노동부에 요구했다”라면서 “게다가 매년 일자리 감소 괴담을 유포하며 최저임금 동결을 호소하는 자본가 조직이다”라고 강력하게 규탄했다.

류진 풍산 회장에게 해고당한 피해 당사자 문영섭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풍산마이크로텍지회장은 “고용승계와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시작한 지회 노동자들의 투쟁이 13년 차에 접어들었다”라고 분노했다.

문영섭 지회장은 “풍산마이크로텍 해고 사태의 모든 책임은 류진 회장에게 있다”라면서 “류진은 노동조합을 없애기 위해 휴가 기간에 공

장을 기습 매각했다”라고 폭로했다.

문영섭 지회장은 “노조탄압을 13년

째 자행한 류진이 한

경협은 정경유착하지 않고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고 한다”라면서 “자신이 내뱉은 말을 조금이라도 실천하려면 풍산마이크로텍 노동자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꼬집었다.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한경협 신임 회장에 비리와 노조탄압으로 점철한 풍산그룹 류진 회장이 선출됐다”라면서 “한경협의 실체와 류진의 비리를 폭로해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게 하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2010년 12월 말 풍산그룹 류진 회장은 전체 노동자들이 휴가 기간 동안 풍산마이크로텍을 기습 매각했다. 부회장이 직접 공장을 찾아 “매각은 없다”라고 선언한 게 며칠 전이었다.

사측은 투자 유치를 명분으로 임금 삭감과 정리해고 수용을 요구하다 노조가 받아들이지 않자 2011년 11월 58명을 정리해고했다. 40개월 동안 일터로 돌아가지 못하고 길거리에서 고통받던 정리해고자들은 대법원의 부당 해고 원심 확정으로 일터로 돌아왔다.



자본은 복직 13일 만인 2015년 2월 26일 도금작업 메인 공장에 화재가 발생하자, 경기도 화성으로 공장을 이전하고 희망퇴직을 강요했다. 현재 풍산마이크로텍 노동자들은 부산과 화성을 오가며 가족과 떨어져 고통스럽게 살고 있다.

한경협은 2015년~16년 박근혜 정권 당시 미르재단 기금 마련, K스포츠재단 설립 모금 주도, 대안경제교과서 배포, 어버이연합 비자금 입금 등 국정농단에 개입했다. 전경련 회비 대부분을 내는 현대차, 삼성, 엘지, 에스케이가 모두 탈퇴해 명맥만 유지해왔다.

지난 8월 22일 전경련은 임시총회를 통해 한경협(한국경제인협회)으로 명칭 변경을 결정하고 류진 풍산그룹 회장을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

윤석열 정부 산업통상부가 명칭변경과 정관 개정을 승인하면 2016년 국정농단 사태로 전경련을 탈퇴한 현대차, 삼성, 엘지, 에스케이 등 4대 그룹이 7년 만에 한경협에 합류한다.